

독도 '주권 미지정'서 1주일만에 원상회복

정부·국회, 美 전방위 압박... 부시결단 이끌어내

中·러와 비교 논리적 공세 주효
한국민 '반미' 여론 악화 부담도



지난달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장관실에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만난 유영환 외교교통상부 장관이 '독도 표기'가 원상회복된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지명 검색결과 출력물을 들어보이며 웃고 있다. 확대해 보면 'Country'의 항목이 'South Korea'로 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미국 지명위원회(BGN)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외국지명 검색란에 '리앙쿠르 독스'를 입력하면 독도가 귀속된 국가에서 '한국'과 '공해(ocean)'가 사라지고 '주권 미지정 지역'이 나타났던 것이 1주일만에 원상회복됐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주미 대사관과 국회의원들을 통한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설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결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BGN의 독도 표기방식 변경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독도를 일본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분쟁지역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한국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무부 곤살로 갈레고스 부대변인이 "BGN의 독도 표기변경은 미국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

건 표준화 노력에 맞춰 이뤄졌다"고 언급, 사실상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듯했다. 이런 가운데 이태식 주미 대사는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을 잇따라 만나 BGN의 독도표기 변경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네그로폰테 부장관 등은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해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둘과구는 지난달 29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 대사의 면담을 통해 마련됐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이 대사

와 만나 "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 여기에 마침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의원외교협회 소속 김효석·박진·김부겸·황진하·류근찬 의원 등의 의원외교가 큰 도움이 됐다. 이들은 29일 저녁 워싱턴에서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심야 독도문제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

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주미대사관과 역할을 나눠 미 의회 쪽을 설득하기로 했다. 우선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한미의원외교협회 회의에서 BGN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의 부당성을 적극 거론, 미국측 의원들의 지원을 얻어 내기로 하고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국측 의원들을 상대로 독도 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 미 의원들로부터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 표기 변경을 유보토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환경소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BGN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 고유명칭 되찾아야

■ 향후 남은 과제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한국령으로 1주일만에 되돌려 놓았지만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은 여전히 독도를 '리앙쿠르 암(岩)'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독도를 한·일간의 분쟁지역으로 보고 독도를 '독도'로 부르는데 주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펴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데 열을 올리는 한편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독도=분쟁지역' 인식은 그대로=미국 BGN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기로 했지만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지역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1977년부터 30년 넘게 '독도' 대신에 사용해 온 '리앙쿠르 암'이라는 공식 지명도 그대로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에 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여론에 부담을 느껴 이뤄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한국 외교의 목표는 지난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의 고유 명칭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유럽과 중국 등 세계 대부분의 지도에 독도가 아예 누락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지명 사전에도 독도 대신에 '리앙쿠르 암'이나 '다케시마'로 올라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과서 문제는 해결 단초도 안 보여=독도 표기문제 못지않게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침탈 야욕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등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에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나 일부 우익인사의 망언 등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가 나서서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훨씬 더하다는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 美 태도 왜 바꿨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미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을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독도 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한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조기 매듭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뒤 독도 표기 문제를 원상회복토록 결정하고 이를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 대사에게 통보했다. 이 대사는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게 결정사항"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변경문제에 대해 이처럼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정부가 사대

쇠고기에 놀란 부시 방한 앞두고 '악재' 없애기

이후 필사적인 외교적 설득 노력을 펼친데다 이번 일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 등을 두루 감안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 자체가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 등과 비교할 때 이중기준인데다, 실질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독도가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표기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필사적인 설득노력을 펼친 것은 미국의 신속한 원상회복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일차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부시 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독도 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이태식 주미 대사 등 우리측 관리들이 직접 만나 설명하고 원상회복을 설득한 것이 주요한 셈이다. 이태식 대사는 특히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힐 차관보 등을 잇따라 만나 독도표기 변경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가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날초 방한을 앞둔 가운데 동맹인 한국인들의 관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

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부시의 방한 시기가 원래 7월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부시가 방한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나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기관인 BGN이 한국령인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사태는 한국인의 반미감정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부시와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부시의 '원상회복' 지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권 미지정지역' 결정 자체가 지닌 결점들도 부각됐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한국 "美 신속 조치 환영"
日 "美 입장변경 아니다"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자국 지명위원회(BGN)의 조치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한데 대해 한국 정부는 환영을 표한 반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보지 않는다"며 당황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외교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25일 지오넷 상 독도영유권 표기 변경으로 야기된 상황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정부는 독도에 관한 미국내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의 내각 대변인격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홈페이지상의 표기 변경은 미국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일개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면서 향후 미국 정부가 항의하거나 후쿠다 아소(福田康夫) 총리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표기의 재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13th Gangjin Celadon Festival 2008. The ad features a photograph of people at a festival and lists various activities and dates. Text includes: '제3회 강진청자문화제 The 13th Gangjin Celadon Festival 2008', '2008. 8. 9(토) ~ 8. 17(일) / 9일간 / 전라남도 강진군 고거항자도오지 일원', and a list of activities such as '국악공연', '전통 민속놀이', '민속놀이 체험', '민속놀이 시연', '민속놀이 시합', '민속놀이 시범', '민속놀이 시범', '민속놀이 시범', '민속놀이 시범'.